

‘교권보호 5법’ 시행 1년...교사들 ‘모욕·명예훼손’ 여전

작년 광주 150건·전남 91건 접수
교보위, 출석정지 등 징계 많아
“경쟁 중심 교육환경 벗어나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2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24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광주와 전남은 각각 151건, 91건이었다.

학교급별로 광주는 중학교 교보위 개최 건수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교 31건, 초등학교 26건, 특수학교 3건 등이었다.

전남은 중학교 53건, 고등학교 22건, 초등학교 15건, 유치원 1건 등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광주의 경우 모욕·명예훼손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와 상해·폭행은 각각 46건, 16건에 달했다.

전남은 교육활동 방해 32건, 모욕·명예훼손 15건, 영상 무단 합성·배포 11건, 상해·폭행 10건 등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의 피신고자 중 학생은 93.4%(광주 95.3%·전남 90.1%), 보호자는 6.6%(광



영농철 논갈이 진객 황로·백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2일 영농철을 맞은 광주 북구 농촌마을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논갈이를 하자 여럿 철새인 황로, 백로 등이 날아들어 먹이를 찾고 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2일 영농철을 맞은 광주 북구 농촌마을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논갈이를 하자 여럿 철새인 황로, 백로 등이 날아들어 먹이를 찾고 있다.

김태규 기자

주 4.7%·전남 9.9%)를 차지했다.

광주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53건 △사회봉사 31건 △학교에서의 봉사 29건 △전학 10건 △학급교체 5건 △퇴학 0건 등으로 중징계보다 경미한 조치가 많았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특별교육, 고소·고발 등이 이뤄졌다.

전남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28건 △전학 16건 △사회봉사 13건 등 조치가 내려졌으며,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9건의 조치 중 4건이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결론지어졌다.

전국적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199건으로 나타나 서이초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수많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겪고 있는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050건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유치원은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하며, 저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침해 신고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법·제도적 정비만으로는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경쟁 중심 교육구조와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교육환경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변화는 커녕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며 “일부 학부모들의 악의적인 교권 침해 행위는 여전하며, 교사들이 교권침해 관련 소송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학습량과 경쟁 중심의 교육환경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감수성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

고, 예체능 등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스승의날에 형식적인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 아닌 교사의 권익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광주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사 지원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은 만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합한 의견을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최환준 기자

광주 남구, 소상공인 경영자금 14억 추가 지원

신우 등 지역 신협 9곳 협약

광주 남구가 경기침체로 어렵게 경영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신우·웨슬리·남광주·방림·샘·입하·삼에·양동·화정 신용협동조합 등 9곳은 최근 남구와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경영자금 제공을 위한 희망대출 지원에 나섰다.

이달부터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14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별 제공 금액은 500만~1,000만원이며, 금리는 5.5%이다.

구정에서 4.5%의 이자 비용을 제공함에 따

라 지역 소상공인은 1% 이자로 경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남구에서 지역 금융권과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2월 21일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광주는행과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은 뒤 금융자금 3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같은 달 26일에는 지역 새마을금고 5곳과 희망대출 협약을 통해 14억원을 공급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 초부터 골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입한 48억여원까지 합산하면 62억여원에 달하는 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전교조 전남지부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촉구

대다수 학교 일정 취소·유예 중 교사 보호 조항 명시 조례 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12일 전남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속초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전국 학교는 체험학습 추진에 극심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실제로 다수 학교가 일정을 취소하거나 유예 중이며, 일부는 학부모 요청에 마지못해

일정을 추진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불안을 외면한 채 청렴캠페인을 내세워 체험학습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며 “현실은 도외시한 채 실적용 캠페인에 몰두하는 이 모습은 학교 현장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물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적·행정적 대책이다”며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 조항이 명시된 조례를 즉시 제정·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내 방문형 체험학습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고, 체험처 발굴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력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5월호 ‘행정업무 최적화 뉴스레터(TIP)’에 ‘현장체험학습! 3김타파’를 ‘신리 코너’로 소개하며 청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



셀리아의 특별한 케어!

영롱하게 빛나는 생기있는 피부,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약속

건강한 피부 | 빛나는 삶 | 특별한 케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문의 : 080-385-0080



CELLIA